



# CONSTRUCTION NEWS

## 등급공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최저가공사 주관적 심사항목 반영

**중**소건설업체가 정부시설공사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등급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이르면 3월부터 완화되고,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비,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주관적 심사항목이 반영된다.

진동수 조달청장은 지난 2월 9일 대전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조달청이 추진할 4대 정책목표와 20개 세부 이행과제를 밝혔다.

조달청은 올 4대 정책목표를 △조달사업을 통한 정부정책 지원 △전자조달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공공조달 효율화 선도 △고객감도의 최고가치 구매서비스 제공 △선진 건설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공사 품질 제고로 정했다.

이 중 공공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수계약자 선정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고객 중심의 전문건

설서비스 제공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제도 조기 정착 △적정 공사비 책정을 통한 정부 공사품질 향상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진 청장은 “중소·지방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부문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에 의한 시설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구매분야에서는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의무경쟁제도와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도입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등급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조치는 이르면 3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보고 있다.

진 청장은 “최저가낙찰제와 지자체 공사에 대한 자체 발주 범위 확대 등으로 공공공사 품질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터널이나 교량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별 수행능력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평가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PQ공사에 대한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의 경우 올 시공능력평가액이 먼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적용시기는 일러야 7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진 청장은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 시공업체의 계약이행능력까지 평가될 수 있도록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주관적 심사항목을 반영하고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저가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공여건이나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차등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이나 공사, 설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분석한 공사유형별 단위공사비 자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사위가 사전검토를 강화해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100억원 미만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패키지서비스 적용범위를 턴키공사의 설계심사업무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유형도 현행 6종에서 8종으로 늘리고 공공부문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를 위해 CM계약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본격 제공하며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해 물가변동 검토대행 서비스를 현행 총사업비 대상공사에서 모든 조달계약 공사로 확대하게 된다.

이밖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사이행관리실태와 아전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실시간 현장관리가 가능하도록 웹 기반의 ‘e-공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린계시관’을 통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조리를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문고' 를 자체 공사관리 현장에 설치해 운용하게 된다.

## “실적공사비제도 공사 품질 외면”

### 건산연, 확대 전 제도보완 지적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가 예산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건설공사의 성능과 품질향상이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사비 거품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적공사비 단가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산연은 “정부가 국내 토목·건축공사의 1,857개 표준품셈 공종(기계설비 403개 공종) 가운데 50%인 985개 공종에 대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면 16%의 단가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건설상품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고려치 않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규모와 장소, 품질과 성능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데다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운 실적공사비 기준을 만들 때마다 공사비가 계속 낮아져 품질 향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 “공산품의 경우 실제 투입가격을 단가로 인정하면서도 건설공사에만 유독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로 사용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공산품의 계약 단가는 곧 완성 단가가 되지만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는 완성 단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실적공사비도 실제 완성된 가격이나 실제 투입 노무량 등을 근거로 작성되는 것과 비교해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생산품의 가격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건설공사의 생산가격을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재는 시방서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법은 설계자가 아닌 시공자가 결정하는 데도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발주 대상 공사의 특성과 규모, 발주방식에 따른 공사비 차이를 인정하고 개별 실적단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품셈 기준이 잘못됐다면 폐지하기보다 실투입 노무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하며 실적 단가는 공종 단위가 아닌 완성품 단위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 민·관 어깨 걸고 건설혁신 나선다

###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연대’ 창립

**건**설기술과 건축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41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 혁신과제 발굴에 나선다.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연대를 구성, 지난 2월 22일 출범시켰다.

이날 창립총회를 가진 선진화연대는 김 위원장이 제안하고 건설교통부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공동발의 형식으로 출범했다.

선진화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사회기반 확충과 주거안정 등 현대화 성취를 바탕으로 기술·문화선진국 진입을 위해 품격 높은 환경문화를 조성하고 창조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창조적 협력정신에 기초, 미래지향적인 실천력을 높일 것을 다짐했다.

전문인력 육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 CONSTRUCTION NEWS

협력, 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로 기술력과 디자인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가치를 창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선진화연대에는 민간부문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

하건축사협회 등 17개 건설과년 단체를 비롯해 토목·건축학회 등 6개 학회가 참여했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공기업 및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기

술평가원 등 4개 연구기관이 포함돼 있다.

선진화연대는 각 단체의 참여와 협력방안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오는 4월 정책토론회 형식의 선진화포럼을 개최, 구체적인 혁신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연대 참여기관

구분	비고	
위원회(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진애)	
공기업(13)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 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 SH공사(사장 이철수) 한국농촌공사(사장 안종운)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김철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결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재희)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
관련단체(17)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고담일) 한국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김건호)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석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회장 이강건) 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회장 박영순)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 해외건설협회(회장 유준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이철호)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정장율) 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회장 최관영) 한국건설문화원(원장 김수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이동현) 한국디자인기업협회(회장 김대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장 조행래) 한국항만협회(회장 황호영)
학회(6)	대한건축학회(회장 이리형) 대한토목학회(회장 박창호) 한국디자인학회(회장 우홍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강양석) 한국농공학회(회장 강양석) 한국주택학회(회장 박환용)
연구기관(4)	국토연구원(원장 최병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원장 김창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락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원장 이영욱)



## 주택건설업체, 올해 34만9000여 가구 공급

### 작년 보다 공급물량 14%, 실적 54% 각각 증가

올해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은 전국적으로 전년 공급실적보다 54% 증가한 모두 34만9백여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국 6천800여 회

원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주택공급계획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669개 업체가 34만878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규모는 2005년 공급계획물량인 29만8100여 가구에 비해 14% 증가한 물량이며, 2005년도 주택공급실적인 18만3891가구에 비해 54%(15만6987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179가구, 인천 1만1211가구, 경기 10만8740가구 등 수도권지역이 13만2130가구로 전체의 39%에 이른

다. 서울,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부산 2만8653가구, 대구 2만7774가구, 광주 1만291가구, 대전 4468가구, 울산 1만1896가구 등 8만4882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경기지역을 제외한 도단위에서는 충남 3만7051가구, 경남 2만1115가구, 충북 1만3767가구, 강원 1만5240가구, 경북 2만3680가구, 전북 1만945가구, 전남 1900가구, 그리고 제주 168가구 등 12만3866가구를 공급한다.

종류별로는 분양주택이 31만9808가구로 전체공급물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

### 2006년 규모별 주택공급계획

구분 지역	계	주택공급계획				
		60㎡이하	60-85	85-102	102~135	135㎡초과
계	340,878	18,067 5.30%	159,224 46.70	41,826 12.30%	79,923 23.40%	41,838 12.30%
서울	12,179	169	4,691	2,038	2,738	2,543
부산	28,653	2,738	10,890	6,098	6,581	2,346
대구	27,774	225	9,731	3,479	7,667	6,672
인천	11,211	709	3,911	870	4,927	794
광주	12,091	132	7,635	1,617	1,530	1,177
대전	4,468	0	1,441	724	712	1,591
울산	11,896	445	3,177	890	3,601	3,783
경기	108,740	7,183	56,711	10,744	23,008	11,094
강원	15,240	428	7,830	1,792	4,674	516
충북	13,767	391	6,099	900	4,243	2,134
충남	37,051	1,457	15,958	5,902	8,639	5,095
전북	10,945	898	5,086	1,840	1,695	1,426
전남	1,900	0	1,324	66	480	30
경북	23,680	1,141	11,419	3,396	6,138	1,586
경남	21,115	2,151	13,183	1,470	3,272	1,039
제주	168	0	138	0	18	12

# CONSTRUCTION NEWS

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임대 1만320가구, 재건축 6638가구, 재개발 371가구, 기타 1041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재건축 물량은 서울(3225가구)과 경기(1343가구), 충남(558가구), 인천(528가구) 지역에 집중(85%)되어 있다.

또한 주택공급규모별로는 전용면적기준 18~25.7평이 15만9224가구로 전체공급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30.82~40.8평 7만9923가구(23%), 40.8평 초과 4만1838가구(12%), 25.7~30.8평 4만1826가구(12%), 그리고 18평 미만 1만8067가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 규모인 18평 이하의 공급계획물량이 전체 공급계획물량 대비 5%로, 2003년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2003년 16%, 2004년 11%, 2005년 7%)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중·대형 규모에 대한 주택공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대한리츠가 569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현진 4379가구, 한라 3824가구, 디비아이인터내셔널 3803가구, 송도신도시개발 3750가구 등의 순이다.

## 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

### 공정위, 같은 유형에 벌점 가중

**앞**으로 동일한 유형으로 하도급법 위반을 반복하면 가중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부과방식도 현재의 대표 조치 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 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는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이 반복돼도 동일한 벌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법 위반 유형에 모두 벌점을 부과하고 법 위반을 반복하면 가중벌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3개 이고 이 중 1개가 반복 위반이며 3개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현재는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에만 벌점이 부과돼 2점의 벌점을 받지만, 앞으로는 3개의 법 위반 유형의 법 위반 반복에 대해 가중벌점까지 부과돼 6.5점(유형별 각 2점, 반복시 0.5점 가중)의 벌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유형별 벌점 및 누적벌점으로 벌점이 현재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벌점이 4점 이상이면 과징금 및 공표명령 조치, 10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5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한다.

한편 최근 3년간 누적벌점 상황을 보면

12점, 9점, 7점이 업체가 각 1곳씩이고 6점이 3곳, 5.5점이 2곳 등이나 누적벌점을 받은 업체 수가 48곳에 불과해 벌점제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조달청 발주권한 단계적 이양

### 진동수 조달청장, 서울대 ACPMP 강연서 밝혀

**내**년부터 조달청의 공사발주 권한이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이양된다.

진동수 조달청장은 지난 2월 8일 서울대 ACPMP(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초찬 강연에서 조달청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만을 담당하고 기타 공사는 각급 기관이 자체 발주하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00억원 미만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2008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PQ 대상공사의 발주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발주권한도 이양되 예산낭비 방지와 공사 품질제고를 위해 추경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가격심사에서 탈피해 계약이행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저가심의회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공사이행 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점검체제도 구축,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할발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초대형 발주를 억제하는 대신 가능한 한 분할발주를 통해 중소형 터키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

진 청장은 또 터키발주가 고난도 공사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방법 심의도 강화해 최저가낙찰제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적격심사제의 심사기준에는 완공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요소를 추가로 반영하고 재해율, 환경규제 위반 등 신인도 분야가입·낙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력 발전을 유도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활보를 위해 CM계약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실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판단

### ‘고용촉진·직업재활법’ 등의 결

앞으로 건설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여부는 하도급금액을 뺀 총공사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등 4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를 도출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을 노동부의 고시액으로 나눈 후 50인을 곱한 수를 근로자 총수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53억 4,400만원이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공사실적이 100억원인 사업장의 경우 하도급공사실적이 50억원 일 경우에는 장애인공용의무 적용대상업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하도급공사실적이 40억원이면 공사실적이 노동부 고시액을 넘게 돼 의무

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 장애인공용팀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실적 가운데 하도급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의무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200인 이상(내년부터는 100인 이상으로 강화)인 경우이다.

## ‘부실 제보’ 정부가 직접 조사

### 건교부, 지방국토청 신고센터 활용

정부가 공사현장의 부실제보를 받아 직접 조사·처리한다.

제보는 현장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도 할 수 있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한 부실신고센터에서 부실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보가 신고될 경우 해당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처리해왔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같은 간접 처리방식으로 인해 처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제는 건설공사의 건설시공을 유

# CONSTRUCTION NEWS

도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관리청 소관공사에 대한 부실신고사항은 부실신고센터에서 직접 현지조사,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게 된다.

또 인·허가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공사나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소관공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실민원이 신고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해 부실사안에 따라 직접 또는 인·허가 및 승인기관, 발주기관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공공공사는 물론 아파트 건설공사 등 민간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토관리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직접조사 대상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거나 혹한기에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레미콘에 물을 타는 행위나 철근간격이 제대로 배근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

다만 제보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어 낱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과거처럼 해당 발주기관에 이첩하고 음해성 제보 여부 등도 파악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부실신고센터 운영이 개선되면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함을 물론 건설공사의 신뢰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전담당자 지정절차 폐지

###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주 보고로 갈음

관 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올해 안으로 없어지는 등 노동 관련 규제가 대거 정비된다.

노동부의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88건의 규제와 진폐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관련 9건에 대한 규제가 손질된다.

노동부는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위해 유해 및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직무도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또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시간 안에 지방노동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사업주가 보고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나 산재요양 신청과 관계없이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대상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사업장은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간소해진다.

아울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 도급액이나 사업비에 계상

해야 했던 산업안전관리비 중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이 폐지된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정신청 때 법인등기부등본 제출도 생략된다.

노동부는 또 배치 전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채용과 사업장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실시하도록 했던 안전보건교육시간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방호장치 및 보호구 성능검정 면제범위 확대 △진폐작업환경측정대행자 지정 때 대행지역 제한 폐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구체화 등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노사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서울시, 5억 이상공사 계약심사

### 출연기관 발주사업도 적용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심사대상 건설공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심사제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시비지원 건설공사의 계약심사제 적용 건설공사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조경과 정기공사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용역은 5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과 세종문화회관 등 7개 출연기관의 발주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도 계약심사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본청과 산하기관의 계약심사대상 공사와 용역은 지금처럼 각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시는 올해 시비지원 자치구와 공기업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올해 예산 절감액이 1,600억원으로 지난해(1,355억원)에 비해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계약심사제가 지난 2003년 2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예산절감액이 모두 4,474억원에 이른다면서 “계약심사제가 지자체의 성공적인 원가절감 모델로 정착되면서 부산과 대구, 경북, 충남 등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경남도와 울산시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는 원가심사 전담조직이 발주부서(기관)가 제출한 사업비를 심사, 최적의 예정가격을 산출한 뒤 발주토록 하는 장치로서 조달청과 민간건설기업의 원가절감시스템을 지자체 계약행정에 접목한 것이다.

## “지역업체 60%까지 공동도급”

### 인천시, 50% 이상 하도급도 검토

인천시가 국내입찰(70억원 이상 252억원 미만)과 국제입찰(252억원 이상)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가 각각 60%와 30% 이상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하도급과 관련, 대상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역업체가 도급할 수 있도록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23일 안상수 시장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 △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시는 우선 전문과 설비, 가스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업체를 선정, 건설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건설업체가 이들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지원해 우수업체들의 공사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 협력업체 등록기준 완화를 대형업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들을 엄격히 제재하고 중소기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 건설업체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문 및 일반건설업체의 상호협력을 위해 업체간 간담회를 개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 올해 4조4179억원 발주

시의 올해 건설사업 규모는 모두 410건, 총 4조4,17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5%(2,305억원) 증가한 것으로 252억원 이상 공사가 33건 3조 8,729억원, 70억원 이상 252억원 미만 공사가 87건 3,479억원, 70억원 미만 공사가 290건 1,917억원을 차지한다.

기관별로는 지자체가 334건 3조897억원을 집행하고 정부투자기관이 48건 1조 2,941억원, 교육청이 28건 341억원 등을 발주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경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송도 6·8공구 매립, 해안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88%(2조18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유 도시균형건설국장은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재창조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투자 효과도 빠르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